

‘외국인투자’ 국가안보 위협 시 신고 없이도 직권 심의로 대응

산업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국가안보 위협 최소화 전략 방안 외투 안보심의 기간 등 대폭 조정

앞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미신고’ 외국인투자에 대해 정부의 직권 심의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또 국가첨단전력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해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우리 투자기업의 첨단산업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산업기술보호법’

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타법령 상 유사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외국인투자가의 이중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검토를 위한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90일에서 45일로 조정했다.

또 외국인이 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건이 안보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안전보건공단

배달종사자 안전교육 수도권 등 지역 확대

안전보건공단은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과 이륜차 배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라이더 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라이더 안전교육’은 기존 수도권 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해 광주·대구·부산 지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륜차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을 주제로 이론교육과 가상현실(VR) 체험을 병행해 실감이나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아한청년들은 교통사고 처리 방법, 안전배달 노하우 및 이륜차 점검·정비 기본 등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찾아가는 라이더 안전교육’ 이외에도 이륜차 배달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터넷 교육과정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240여 종의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는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이륜차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공단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교육생들이 안전보건공단의 가상현실 교육을 체험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장의 모습. /뉴스스

내달 농가 77곳에 ICT 장비 등 스마트축산 패키지 모델 보급

농식품부, 축산 운영 솔루션 지원 경영비 절감 등 농가 문제 해소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등을 포함한 스마트축산 모델을 전국 77개 농가에 보급한다. 이를 통해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 악취·탄소 저감, 동물복지, 방역강화 등 축산농가가 직면한 문제 해소를 돋는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모델’ 및 지원대상 축산농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주요 축산작업을 원격·정밀 제어하는 데 필요한 ICT 장비 세트와 운영 솔루션을 함께 지원하게 된다.

외부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2024년 보급 패키지 모델은 총 21개이다. 축종별로는 한우 4개, 낙농 7개, 양돈 4개, 양계 6개 등이다. 분야별로는 생산성 향상 9개, 탄소·악취 저감 5개, 경영·사료비 절감 4개, 개체건강 및 번식관리 3개이다.

축종별 우수평가를 받은 모델은 ▲ 개체별 생체정보 수집기(목걸이형 웨어러블)를 활용해 송아지 폐사율 감소가 기대되는 ‘송아지 건강·생육관리 솔루션(한우)’ ▲ 젖소에 특화된 축사환경 및 사양관리를 지원해 일 평균 착유량

15% 증가가 기대되는 ‘젖소 착유량 향상 솔루션(낙농)’ ▲ 입체(3D) 체형 스캐너와 임신·모돈 작동 급이기 등을 연계 운영해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전망되는 ‘모돈·임신돈 최적관리 솔루션(양돈)’ ▲ 가금류에 적합한 환경제어 장치와 사료빈 관리기, 육계 통합 운영관리 플랫폼을 제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이 예상되는 ‘육계 생산성 향상 솔루션(양계)’ 등이다.

또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지원대상 축산농가를 엄선했다. ▲ 축종 ▲ 사육규모 ▲ 축사 현대화 여부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역량 ▲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종합 심사해 지원 대상 농가 77곳을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패키지 우수모델이 신속히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예산 지원 등 협업을 강화해, 도입에 따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패키지 모델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축적된 축산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등 전반적 기술 수준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등 전문가를 활용해 현장 밀착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올해 최고 김치에 ‘미금치 율무총각김치’

농식품부, ‘대한민국 김치품평회’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임진강김치의 ‘미금치 율무총각김치’ 등 8개 김치 제품을 올해의 수상제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김치품평회’는 매년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다. 이를 통해 김치 품질향상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대상을 차지한 ㈜임진강김치의 ‘미금치 율무총각김치’는 황태가루와 멸치가루를 활용한 육수에 율무가루를 혼합해 감칠맛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 ㈜우영채널의 ‘대복 포기김치’ 우수상은 ▲ ㈜청원오가닉의 ‘포기김치(골드)’ ▲ 참식품주식회사의 ‘전주찬방총각김치’ ▲ 농업회사법인 솜씨가족의 ‘솜씨가’ 장려상에는 ▲ 한복 심남도손김치의 ‘한복심 알타리김치’ ▲ 농업회사법인 ㈜제이엠퓨드의 ‘진미네명품김치’ ▲ ㈜임진강김치의 ‘미금



미금치 율무총각김치. /뉴스스

치 율무포기김치’가 각각 선정됐다.

대상 수상업체에는 국무총리상과 상금 1000만 원, 최우수상에는 농식품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 우수상에는 농식품부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장려상에는 유통공사 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 22일 ‘제5회 김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린다.

농식품부는 수상 제품에 대해 공영홈쇼핑 출품, 온라인 마켓 입점, 할인기획전 등을 지원한다. 또 ‘제5회 김치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한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전 “고객참여 부하 차단제로 650MW 확보”

감축실적 용량 따라 보상금 지급

전력계통 고장 시 계통을 안정화시키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에 제지업종 등 44곳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4월 해당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4호(650MW)의 고객을 확보했다며 본격적인 제도 운영으로 광역 정전 예방과 발전제약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란 주파수 하락 등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한전과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즉시 차단해 계통을 안정화시키는 제도다.

제도 가입 고객은 특히 제지 업종이 약 82%를 차지하는 등 제지·철강·2차 전지 등 정전 시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제도 가입

률이 높았다.

가입 대상은 154킬로볼트(kV) 이하 전용선로 이용 대용량 고객으로, 부하 차단 시 지급하는 동작보상금 규모가 크고, 차단 지속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짧은 점이 제도 가입 유인책으로 작용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전력 차단시 보상은 계약기간(1년) 내 감축기준용량에 따라 연 1회 지급하는 운영보상금(1320원/kW·1년)과 실제 부하차단 시 감축실적 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동작보상금(9만8400원/kW·1회)이 있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고객들이 추가로 제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전은 안전, 환경, 고객 부하특성 등 계통 기여도를 고려해 제도에 적합한 고객과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5개국 고용노동 담당 공무원 초청 연수

노사발전재단, 라오스 등 14명 방문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10일 간 라오스, 동티모르, 요르단, 케냐, 도미니카 공화국 등 5개국 14명의 고용노동 담당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부터 ‘일의 세계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 역량 강화’를 주제로 코이카(KOICA) 글로벌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5개국 고용노동분야 공무원을 한국에 초청해 한국의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 강의, 현장 견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5개 국가의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의 구체적인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 경험과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고용노동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행정을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했다. ▲ 한국과 해외 주요 국가의 성차별 시정과 여성 대표성 제고 사례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촉진제도 ▲ 모성보호·육아 지원 정책 제도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처리 제도 ▲ 한국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및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정책 안내 등이다.

5개국 공무원들은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 중장년내일센터를 방문해 경력 단절 여성의 정보기술(IT) 분야 재취업 지원 등 여성 재취업을 위한 현장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봤다. 중앙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 시정 지도에 대해 학습했다.

/김대환 기자 kdh@